

수 신 각 언론사

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시민행동,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발 신 (문의 : 이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010-2537-9401
김예찬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010-8873-8394)

제 목 8/3(목) 10:20, 검찰 특활비 등 국정조사 및 특검촉구 기자회견

날 짜 2023. 8. 2. (총 4 쪽)

보 도 협 조 요 청 서

8/3(목)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 특활비 등 불법의혹 국정조사 및 특검 촉구 기자회견

- 7월 31일 5만명 국민동의 청원 성립. 국회 법사위 회부 -
- 한동훈 장관의 발언과 법무부의 가짜뉴스 유포 등을 볼 때,
4가지 불법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및 특검 불가피 -
- 불법 자료폐기에 대한 공소시효는 1년도 남지 않았을
가능성 높아 -

1. 8월 3일(목)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세금도둑잡아라/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함께하는 시민행동은 검찰 특수활동비 등 불법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및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이 기자회견은, 7월 31일 국정조사 및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을 달성하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로 청원이 회부되었으므로, 국회의 역할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2. 지난 6월 23일 검찰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관련 자료가 사상 최초로 공개된 이후 아래와 같은 여러 불법의혹들이 드러나고 있다.

첫째, 2017년 1-4월 대검 특수활동비 자료, 2017년 1-5월 서울중앙지검 특수활동비 자료가 불법폐기됨. 자료 폐기 자체는 한동훈 장관도 국회 법사위 현안질의에서 인정한 바 있음. 회계자료의 보존연한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기록물 폐기시에는 심사와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비추어 볼 때, 2달에 1번 폐기했다는 것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의 범죄행위이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둘째, 기밀이 요구되는 수사활동에 직접 사용해야 하는 특수활동비의 용도에 맞지 않는 세금 오·남용 사례들이 드러나고 있음. 2017년 9-12월 대검 특수활동비중 2억원 가까이 영수증이 없는 상황임. 또한 연말에 몰아쓰기한 부분, 명절 떡값으로 사용한 부분 등은 특수활동비의 용도에 맞지 않는 지출임. 그 외에도 추가적인 세금 오·남용 사례가 더 있을 수 있으며, 수사결과에 따라 업무상횡령과 특가법상 국고손실죄가 성립될 수 있음. 과거 국무총리실 특수활동비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에서 이와 같은 죄가 인정된 바 있음.

셋째, 법원 판결문을 위반하여 업무추진비 카드전표의 상호·사용시간을 가렸고, 흐리게 복사되어 식별불가능한 카드전표에 대한 원본대조 요구를 거부하고 있음. 이는 국민의 알 권리 행사를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것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음.

넷째, 정보공개소송 과정에서 ‘특수활동비 정보부존재’를 주장했으나, 이는 명백한 허위였던 것으로 드러남. 무려 6,805쪽의 집행서류가 존재했음에도,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 준비서면, 항소이유서 등에서 허위주장을 한 것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에 해당할 수 있음.

3. 이에 세금도둑잡아라/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함께하는 시민행동은 7월 21일 국회법과 국회규칙에 따른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했으며, 7월 31일까지 5만명의 시민들이 서명에 참여하여 청원이 성립되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청원이 회부된 상황이다.

4. 검찰 핵심부와 관련된 불법의혹들에 대해 검찰 스스로 수사하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지난 7월 26일 국회법사위 현안질의에서 특수활동비 자료 폐기를 시인하면서도,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또한 업무추진비 카드전표에 대해서도 '휘발' 발언을 하고, 법무부는 판결문을 왜곡하는 '가짜뉴스'까지 유포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특수활동비 자료 불법폐기의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1년도 남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므로, 국회에서 신속한 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지금은 국정조사와 특별검사를 통한 진상규명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므로,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에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하고자 한다.

5.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주민 의원(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이 참석해서 발언할 예정이다.

<기자회견 개요>

■일시 : 2023년 8월 3일(목) 오전 10시 2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주최 : 세금도둑잡아라/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함께하는 시민행동

■기자회견 진행(안)

사회 : 김예찬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의원 발언 : 박주민 의원

시민단체 발언 : 국민동의청원의 취지와 자료 불법폐기의 심각성(정진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불법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의 필요성(하승수 세금
도둑잡아라 공동대표)

기자회견문 낭독(함께하는 시민행동 정남진/박배민 활동가)

<기자회견문>

검찰 특수활동비 등 불법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한다

- ‘2달에 1번 폐기’, ‘휘발’을 얘기하는 법무부 장관을 보면, 검찰에
기대할 것이 없다 -

세금도둑잡아라/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함께하는 시민행동은 뉴스타파와 협력해서 2019년 11월부터 검찰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에 대한 정보공개소송을 진행해서 지난 4월 13일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리고 지난 6월 23일 검찰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관련 자료를 사상 최초로 공개받았다. 그런데 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여러 불법의혹들이 드러나고 있다.

첫째, 법에 따르면 존재해야 할 자료가 불법적으로 폐기되었다. 2017년 1월부터 4월까지의 대검찰청 특수활동비 자료, 2017년 1월부터 5월까지의 서울중앙지검 특수활동비 자료가 통째로 사라졌다. 서울고검, 동부지검, 서부지검 등 다른 검찰청도 마찬가지였다. 자료가 불법적으로 폐기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 7월 2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 법사위 현안질의에서 ‘2달에 1번씩 특수활동비 자료를 폐기했다’라고 인정했다. 한동훈 장관은 2달에 1번씩 폐기한 것이 별 문제가 아닌 것처럼 발언했지만, 이는 명백한 실정법 위반의 범죄행위이다. 그리고 검찰 내부에서 이런 범죄행위가 조직적으로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따르면, 회계자료의 보존연한은 원칙적으로 5년이고, 설사 보존연한이 지났더라도 기록물 폐기시에는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심사와 기록물평가심의회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야 한다. 이런 법조항에 비추어보면, 검찰 내부에서 벌어진 조직적인 자료폐기는 명백한 불법이다.

둘째, 기밀이 요구되는 수사활동에 직접 사용해야 하는 특수활동비의 용도에 맞지 않는 세금 오·남용 사례들이 드러나고 있다. 2017년 9월부터 12월까지의 대검찰청 특수활동비중 2억원 가까이 영수증이 없는 상황이다. 또한 연말에 몰아쓰기한 부분, 명절 떡값으로 사용한 부분 등은 특수활동비의 용도에 맞지 않는 지출이다. 그 외에도 추가적인 세금 오·남용 사례가 더 있을 수 있으며, 수사결과에 따라 업무상황령과 특가법상 국고손실죄가 성립될 수 있다. 과거 국무총리실 특수활동비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에서 이와 같은 죄가 인정된 바 있다.

셋째, 법원 판결문을 위반하여 업무추진비 카드전표의 상호·사용시간을 가렸고, 흐리게 복사되어 식별불가능한 카드전표에 대한 원본대조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 행사를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것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이다.

넷째, 검찰은 정보공개소송 과정에서 ‘특수활동비 정보부존재’를 주장했으나, 이는 명백한 허위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무려 6,805쪽의 특수활동비 집행서류가 존재했음에도,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 준비서면, 항소이유서 등에서 ‘정보부존재’라는 허위주장을 한 것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심각한 범죄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발언하고 있다. ‘2달에 1번’ 자료를 폐기하는 불법행위가 저질러진 것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장관이 응당 취해야 할 조치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업무추진비 카드전표의 60% 이상이 흐리게 복사되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사태에 대해서도 ‘휘발’되어 그렇다고 변명하고 있다. 원본대조 요구에도 불응하고 있는 검찰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또한 법무부는 법원의 판결문조차도 왜곡한 가짜뉴스까지 퍼트리고 있는

상황이다. 법원의 판결문에서는 업무추진비 지출증빙서류에서 ‘개인식별 정보’만 가리고 나머지 정보는 공개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호와 사용시간까지 가리도록 판결한 것처럼 가짜뉴스를 퍼트리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보면, 검찰에게는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다. 또한 검찰 핵심부와 관련된 범죄의혹들에 대해 검찰 스스로 철저히 수사하기를 기대하기는 애초부터 어려운 것이기도 하다.

이에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과 뉴스타파는 7월 21일 국회법과 국회규칙에 따른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했다. 검찰 특수활동비 등을 둘러싼 불법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을 요구하는 청원은 순식간에 확산되며, 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했다. 그래서 청원을 공개한 지 열흘만인 7월 31일까지 5만명의 시민들이 서명에 참여하여 청원이 성립되었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청원이 회부된 상황이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국민세금을 오·남용하고, 공공기록물을 불법폐기하고, 정보은폐를 위해 법원판결문까지 무시하고, 법원을 기만하기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행사하는 행위가 처벌받지 않는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법치주의는 설 자리가 없다.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의 혈세를 쓰는 곳에 성역은 없다’고 하지 않았던가? 그리고 검찰 특수활동비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도입은 2017년 11월 자유한국당도 요구했던 것이다. 더구나 특수활동비 자료 불법폐기의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1년도 남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므로, 국회에서 신속한 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는 국민동의청원에 참여한 5만명 국민의 마음을 모아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밥값을 해야 할 때이다.

2023년 8월 3일

세금도둑잡아라/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함께하는 시민행동